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대한상의 브리프

이은주 프랑스 파리10대학 사회법 박사과정

제44호 2017년 12월 11일

편집자주 프랑스 정부가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노동개혁 주요내용과 국민 반응,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노동시장을 어떻게 개혁하고 있나?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과감한 노동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근로자 과보호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고질적인 실업문제의 원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노동개혁 1라운드'는 프랑수아 올랑드 前 대통령이 시작했다. 올랑드 정부는 △노사협약으로 근로시간 연장 허용(주 35시간 → 46시간), △연장근무수당 가산율 인하(25% → 10%), △경영상 해고 기준 완화 등의 결과를 남겼다. '노동개혁 2라운드'는 지난 5월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어받았다. 마크롱은 '노동규제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보다 빠르고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마크롱 정부의 개혁 목표는 현재 9.5% 수준인 실업률을 2022년까지 7%로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3단계의 '개혁 로드맵'을 수립해 공표했다.

1단계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법 개혁'으로 현재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다음 2단계에서는 '실업보험과 직업훈련 정책'을 혁신하고, 3단계에서는 '연금제도를 개혁'할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이미 발표된 1단계 개혁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 주요 내용]

기존 제도 : 올랑드 정부		변경된 제도 : 마크롱 정부
(산별노조 아닌) 개별 노조가 협약체결	기업별 노사협약 확대	(노조위임 받지않은) 근로자 대표가 협약체결
산별협약 우선 (근로시간만 예외인정)	기업별 협약 우선 적용	기업별 협약 우선 (산별협약 예외 적용)
계약직 사용사유, 계약기간, 갱신회수 등 제한(노동법)	계약직 자율 채용	산별협약을 통해 계약직 채용 자율 결정
해고배상금 기준 부재 (재판을 통해 결정)	해고배상금 법제화	법적기준 따라 해고배상금 결정
경영상 해고요건 법제화 (그룹단위 해고정당성 평가)	경영상 해고기준 완화	국내 경영사정만으로 해고정당성 평가

기업별 노사협약 인정범위 확대

지금까지 산별노조가 주로 체결했던 노사협약(단체협약)을 기업 단위로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 직접 교섭해 기업단위의 노사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조의 위임을 받은 근로자 대표에 한해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도 삭제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사협약을 체결하는 길이 열렸다.

노동계는 사용자의 압력 행사로 부당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노조 배제가 아니라 노조 없는 사업장의 교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 교섭 방식]

사업장 규모	교섭 방식
전 사업장	사용자 발의로 사내 투표 시행해 근로자 2/3 동의하면 협약 체결
종업원 수 20명 미만	개별근로자들과 직접교섭 가능
종업원 수 50명 미만	근로자 대표와 교섭 가능

또한 기업별 협약과 산별협약이 충돌하면 기업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 적용되듯 산별협약을 우선 적용하던 기존의 규범체계를 뒤집은 것이다. 올랑드 정부에서는 '근로시간'만 예외적으로 기업별 협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지만, 마크롱 정부는 산별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직업분류, 직무 난이도, 남녀평등, 수습기간, 시간제 근무 등 11개 분야에서만 산별협약이 우선 적용되며 상여금, 휴가 등 그 외 모든 분야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기업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한편 급여와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 근로계약을 수정하는 협약 체결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고용 유지'와 같은 조건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별다른 조건이 없어도 협약으로 근로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된다. 만약 근로자가 협약 적용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100시간의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기업의 인력 운영 자율성 강화

산별협약으로 계약직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법에서는 계약직의 사용사유, 계약기간, 갱신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산별협약으로 이를 넘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근무하는 일명 '프로젝트 계약' 또는 '작업 계약'도 산별협약을 통해 도입할 수 있다. 프로젝트 계약은 외관상으로는 정규직이지만 실제로는 기간제 계약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건설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제도다.

부당 해고 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을 법으로 정했다.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하되 20개월분을 상한선으로 6개월분을 하한선으로 명확히 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손해배상 금액이 판결로 정해졌기 때문에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계약에 근거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면 재택근무가 허용된다. 또한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근로자가 자택에서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재택근무 요청을 거절하려는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 등 적절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법정 해고수당을 10년까지만 증액하도록 제한하고, 해고 구제 기간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줄였다. 또한 기업 경영이 어렵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 시행하는 '경영상 해고'의 평가 기준이 완화되었다. 경영상 해고를 위한 경영사정 평가 기준이 '다국적 기업 전체'에서 '프랑스 내 자회사'의 경영 사정만 고려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마크롱 정부는 분야를 확장하며 강력한 개혁을 계속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들은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쳐 개혁 노선을 수정하거나 중도에 폐기했지만, 마크롱 정부는 꿋꿋하게 정면돌파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친기업 정권이라는 비판과 지지율 하락, 사퇴 요구 등 국민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는 '게으름뱅이 노조'라는 거침없는 표현으로 맞서고 있다.

법률 개정 방식도 획기적이다. 마크롱 정부는 행정명령으로 법률 개정안을 우선 공포 시행하고 차후에 국회 비준을 거치는 '오르도낭스(Ordonnance, 법률 명령)' 방식을 채택해, 개혁 착수부터 관보 게재까지 모든 절차를 4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올랑드 정부에서 국회 논의만 5개월 이상을 끌다가 결국 헌법상 '긴급명령'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것과 비교하면 속도의 차이가 확연하다.

프랑스 국민의 반응은 기대감에서 점차 우려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노동법개정안에 서명하는 마크롱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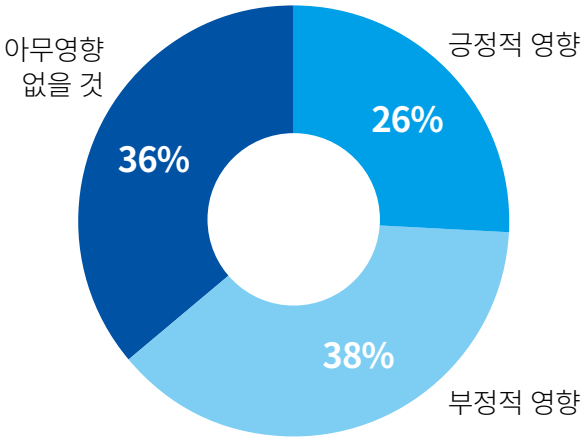
LPC 방송(의회 채널)이 10월에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개혁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5%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은 '노조 권한이 줄어들 것(76%)'과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63%)'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프랑스 신문 르 피가로(Le Figaro)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69%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여론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는 국민들이 고용에 대한 영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오독사(Odox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38%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26%)보다 많았다.

노동개혁의 성패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다양하다. 프랑스 고용연구센터는 이번 개혁이 고용 확대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개혁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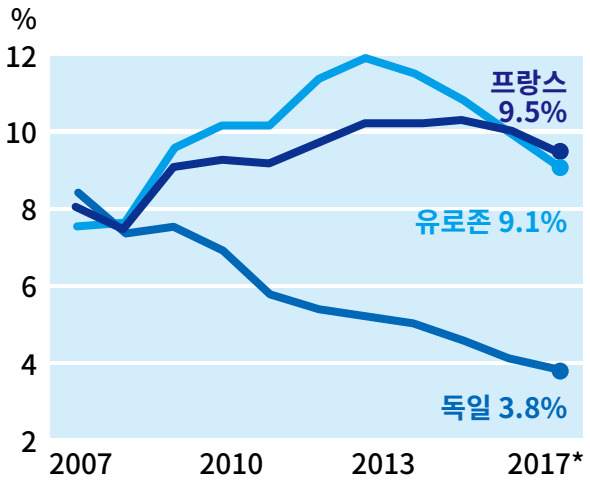


※ 자료 : Odoxa('17년 9월)

'부당 해고 배상금 상한제'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단기적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IMF는 노동개혁과 법인세 인하('17년 33.3% → '22년 22%) 등의 정책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해 1.2%였던 GDP 성장률이 올해 1.6%, 내년에는 1.8%로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현재 프랑스 실업률은 유로존 19개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개혁에 정해진 답이 있다면 갈등도 없을 것이다. 개혁이란 불확실한 예측 아래 치열한 의견 교환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유럽 각국의 실업률 추이]



※ 자료 : EUROSTAT('17년 9월)

프랑스의 개혁 행보가 '문제의 해결'이 될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지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국과 프랑스의 노동제도나 노동시장 상황이 같지만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대·중소기업 간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체감실업률이 20%를 넘는 청년취업 문제, 부족한 사회안전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이 보다 과감한 노동개혁이 절실해 보인다.

국내·외 경제지표

2017년 12월 11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5	2016(E	IMF		OECD	
			2017(P	2018(P	2017(P	2018(P
한국	2.8	2.8	3.2	3.0	2.6	2.8
세계	3.4	3.2	3.6	3.7	3.5	3.6
미국	2.9	1.5	2.2	2.3	2.1	2.4
중국	6.9	6.7	6.8	6.5	6.6	6.4
일본	1.1	1.0	1.5	0.7	1.4	1.0
EU	2.0	1.8	2.1	1.9	1.8	1.8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1)]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7.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원/달러	1,131	1,161	1,130	1,134	1,131	1,132	1,132	1,105
원/엔	934	1,068	1,019	1,009	1,030	1,022	1,002	979
원/위안	180.1	174.4	166.1	167.5	169.2	172.3	171.1	166.8
원/유로	1,255	1,283	1,269	1,306	1,337	1,348	1,331	1,296
유가(Dubai)	32.2	53.8	46.5	50.4	49.3	55.2	58.3	60.82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7.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생산	1.9	3.0	1.7	2.0	2.5	7.4	-2.2	-
소매판매	4.1	4.3	1.1	3.6	0.9	8.4	-0.2	-
설비투자	6.9	-1.3	18.6	24.9	12.4	24.9	-3.4	-
수출	-8.0	-5.9	13.4	19.5	17.3	35.0	7.1	9.6
수입	-16.9	-6.9	19.8	15.5	15.3	21.7	7.9	12.3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